

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0.

발 의 자 : 김병주·박 정·이기현

민병덕·윤후덕·허 영

정동영·추미애·임오경

위성락·박지원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.

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「군 인권업무훈령」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,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

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  
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 
등).

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”를 “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”로 한다.

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) 군인(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)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(이하 “군 내 기본권 침해”라 한다) 또는 다른 군인의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, 합동참모의장, 각 군 참모총장,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부대·기관의 장(이하 이 장에서 “국방부장관등”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다.

1. 제3장의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
2.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
3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군인권침해를 당한 경우

제42조의3(군 내 기본권 침해의 조사 및 구제) ① 국방부장관등은 제42조의2에 따른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

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1. 진정인 · 피해자 · 피진정인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요청
2. 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대 · 기관 ·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 
현장 조사

3. 그 밖에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· 기관 ·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등은 별도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 내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진정 사건의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직권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,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거나 관계 부대 · 기관 · 부서의 장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은 부대 · 기관 ·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

는 아니 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구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4(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) 군인(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)은 군 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.

제43조의 제목 “(신고의무 등)”을 “(신고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4조 본문 중 “제43조”를 “제42조의2, 제42조의4 및 제43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정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 등에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<u>군인 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.</u> 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42조(군인권보호관) ① ----- ----- <u>국가인권위원 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42조의2(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) 군인(군인이었던 자를 포 함한다)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본권 침해 등의 경우(이하 “군 내 기본권 침해”라 한다) 또는 다른 군인의 군 내 기본권 침 해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, 합동참모의장, 각 군 참모총장, 해병대사령관 또 는 각 부대·기관의 장(이하 이 장에서 “국방부장관등”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 다.</u> <u>1. 제3장의 군인의 기본권을 침 해당한 경우</u> <u>2.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</u>

<신 설>

지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

3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  
제7호에 따른 군인권침해를  
당한 경우

제42조의3(군 내 기본권 침해의  
조사 및 구제) ① 국방부장관  
등은 제42조의2에 따른 진정  
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  
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  
로 조사할 수 있다.

1. 진정인 · 피해자 · 피진정인  
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 
요청

2. 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대 ·  
기관 ·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 
요구 및 현장 조사

3. 그 밖에 진정 사건 조사와  
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및  
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 
요청받은 부대 · 기관 · 부서의  
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 
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등은 별도의 진  
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 내 기  
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



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  
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  
른 진정 사건의 조사 또는 제3  
항에 따른 직권 조사 결과 기  
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  
우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,  
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 
이행하거나 관계 부대·기관·  
부서의 장에게 이행하도록 하  
여야 한다.

⑤ 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제4  
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  
받은 부대·기관·부서의 장은  
지체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고  
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 
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  
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  
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 
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  
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  
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 
정에 따른 조사 및 구제의 구  
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3조(<u>신고의무 등</u>) ① (생 략)</p> <p>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 별도로 「국가인 권위원회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 정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44조(<u>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</u>)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, 신고 또는 진정 등(이하 “신고 등”이라 한다)을 한 사람(이하</p>	<p>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2조의4(<u>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</u>) 군인(군인이었던 자를 포 함한다)은 군 내 기본권 침해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 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 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제43조(<u>신고의무</u>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44조(<u>신고자에 대한 비밀보 장</u>)-----제42조의2, 제42조의4 및 제43조 -----</p>
---	---

<p>“신고자”라 한다)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 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신고자 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